



목련꽃 아래 활짝 핀 동심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21.5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7일 광주시 북구청사 앞 인공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패배 책임 한명숙 사퇴로 끝

“빼깎는 쇄신 없인 대선도 어려워”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쇄신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안이한 정국 인식이 계속된다면 총선 패배에 이어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4·11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

여주지 못하면서 민심의 눈총을 사고 있다.

투신 자살 사태까지 빛은 모바일 경선 파동과 끝곳에서 터져 나온 공천 잡음, 전략 부재와 리더십 실종 등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반성과 냉철한 진단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명숙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했

던 당내 주류 세력의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선거인단 결선이라는 사실상의 금권 및 동원 선거를 밟아 불였던 당내 인사들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선 패배 이후의 지도체 문제를 놓고 당내 ‘진노(眞蘆)’ 대 비노(非蘆) 진영간 대립 양상이 펼쳐지면서 민주통합당은 19일짜리 문성근 대표 대행 체제라는 임시 봉합책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다음 달 꾸려지는 비대위 체제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의 이합집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는 점

에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이라며 “민심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자체적인 동력 없이 대선 승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12월 대선에서 집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반성문’을 제출하고 집권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 구성과 차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한계와 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며,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구

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 친노 주류 세력은 물론 각 계파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성과 혁생을 통한 비전 제시만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등을 돌렸던 민심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계파가 복잡하게 얹힌 민주통합당의 구도에서 과연 민심의 결집을 불러올 혁생과 반성이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변하지 않고一如既往 간다면 대선 승리는 갈수록 멀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동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두발·복장 사항 학칙 의무 기재

국무회의 의결…광주 학생인권조례와 정면충돌

앞으로는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발효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생 인권조례와 일선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학칙으로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고 학칙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개정된 시행령이 표면적으로는 ‘학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청은 학칙으로 두발과 복장 등을 규제하는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입학 학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 문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들여다보니

강진 30670원 1인 지출 김해 91561원

〈청자축제〉 〈분청축제〉

광주 충장축제와 강진청자축제 등이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대부분 문화·관광축제의 방문객 소비지출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축제를 열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방문객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축제 실속 없고 만족도도 떨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11 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전국 40개의 문화·관광축제의 방문객 소비지출은 1인당 5만2817원이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값에 비해 8%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축제는 대부분 이에 못 미쳤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1인당 방문객 지출액이 4만4200원으로 전국 평균을 밟았다. 대부분 방문객이 광주 시민이어서 숙박비 비중이 낮

기 때문이다.

또 접근·홍보·안내·재미·체험·문화·상품·시설·연계 등 분야별 방문객 만족도도 평균 이하였다. 강진청자축제 1인당 방문객 지출은 3만670원에 머물렀고, 방문객만족도는 항복에 따라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을 크게 떠나고 있다. 또 축제와 연계해 청자를 판매하고 있는데도, 소평비는 3510원 수준이었다.

도자기를 판매하는 비슷한 성격의 김해분청축제는 방문객 1인 지

출이 9만1561원을 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도자기 빗기 등 관련 행사를 운영하는데도 체험·재미 분야의 방문객 만족도가 낮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양대나무축제 방문객 1인당 지출은 3만950원에 그쳤고, 죽세공품 판매가 가능한 축제인데도 소평비는 2900원(전국 평균 1만 5000여원)에 머물고 있다.

한편 행사와 연계해 1kg당 100만원에 달하는 송이를 판매하고 있는 양양송이축제는 방문객 1인당 지출은 23만9000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광부가 전국에서 열린 40개 문화·관광축제 기간에 지역주민과 타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18개 항목, 소비지출 6개 항목을 조사해 작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의고장 영암 우수농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수로 재배된 영암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타지역 농산물에 비해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친환경농물판매센터(기찬장터)
061)473-2130



영암군농협통합RPC 061)471-0215



신북농협: 061)472-9081



서영암농협: 061)472-5009



매력한우법인: 061)473-0152
덕진농협: 061)473-3207



삼호농협: 061)462-6010



금정농협: 전화 061)472-1777

택배는 하루전에 배송하여 희망일에 도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담당 Tel. (061)470-2380
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기찬장터) 061)473-2130
기찬들쇼핑몰 www.gichandle.co.kr